

# 광주·전남 '통합 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광주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농정 분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라남도(도지사 박순천)와 함께 13일 광주김치타운 발효식품관 세미나실에서 '전남-광주 농정부서 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후의 농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오영걸 광주시 경제창업국장,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공동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양 지자체 농정분야 실무진들이 참석해 정책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통합 이전 단계에서의 정책 조율이다.

참석자들은 농업·축산·식품·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대응 과제를 선정했으며, 향후 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개최 ▲김치산업 통합지원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광주-전남 농업인단체 통합 지원 방안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기준 협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광주김치타운 기능 고도화 ▲동물보호·복지 통합지원 협력 등이 제시됐다.



##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농정 협력과제 논의 농업·유통·축산·식품·김치산업 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 모색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김치타운 고도화 '통합 전략사업' 격상

특히 광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과 광주김치타운 기능 고도화 사업은 양 지역 농산물 유통망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꼽혔다. 양 시·도는 이를 통합특별시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켜 공동 재정 투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와 전남도는 생활·경제·농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 생활권"이라며 "단순한 협력을 넘어 통합 행정 환경에 최적화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농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민 햇빛연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농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광산구 북산동(본량동) 일원 약 20만㎡의 농지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농지를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생산된 전력을 인근 기업에 공급하고, 발전 수익을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으로 환원하는 상생형 에너지

## 전국 첫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발전 광주 본량동에 '햇빛연금' 상생모델 만든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추진돼 농업과 에너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는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농업의 지속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공존, 주민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협약에 따라 본량동 일원 농지에 10MW 규모의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농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도 합의문에 담았다. 광주시와 관계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정책자금 활용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고, 임차농과 자경농 등 실제 영농 종사자의 경작권이 지속 유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인허가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합의 사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 광주기후에너지지존지원, 사업 참여 농민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10MW 규모 발전소는 약 3000가구에서 400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약 150억원 규모의 사업비는 정책자금과 출자 등을 통해 조달되며, 수익은 출자자 등에게 배당하는 구조이다.

이 사업은 기업에는 친환경 전력 확보를 통한 알이(RE)100 실현 기반을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인 '햇빛연금'을 제공하는 상생형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임채일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관광업체 33개소에 총 6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관광업체의 경영 안정과 노후 관광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는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편성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전남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60억 융자 지원 관광업체 33곳 선정... 1% 저금리 시설 개선·경영안정 기대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관광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주은행 등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2026년 여수세계제설박람회 개최와 '전남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대형 관광 이벤트를 앞두고 관광 수요 증가에 예상되는 만큼 관광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관광객 수용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종팔 기자

## 광주시, 평동산단 중심 뿌리산업 특화단지 재편 지역 제조업 강화 위한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추진... 미래차·가전 산업 대응

광주시에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고도화에 본격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평동산단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 해제 신청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운영위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동일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평동일원회는 지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위원장인 김일태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특화단지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융접·접합은 지역 핵심산업인 미래차와 가전산업의 핵심 공정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관련 기업 간 협력과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정 이후에는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혁신 활동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역 대표 뿌리산업인 금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 신청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AI)·디지털 전환(DX) 기반 인력 양성과 데이터 기반 공동 마케팅 지원을 핵심으로, 지역 금형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금형 설계 인력이 최근 5년동안 60% 감소(514→190명)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지정돼 운영 중인 '친환경표면처리특화단지'는 기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 입주 상황과 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평동일원산단단지 20만 1000㎡(약 6만1000평)를 '금형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며, 이번에 '융접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가로 추진하게 된다.

우인 기자

## 농지 임대도 '디지털 시대'... 서류·계약·정보 변경 한 번에

## 농어촌공사,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계약 도입

농지 임대 관련 행정 절차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 한층 간편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이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과 계약 체결,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수 서류 8종을 기관 방문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약 3만1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류 발급 비용과 이동 시간을 크게 줄였다.

계약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공사를 방문해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으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약 14만2000건의 계약이 디지털 방식으로 체결됐다.

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절차도 개선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였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편리함은 높이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을 비롯한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